

싸늘한 민심·신당·지역구 변화 '3각 파도'



현역 의원들 기상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20대 총선 기상도는 최악이다. 대폭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흐름과 신당의 등장, 지역구 지형 변화 등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3각 파도'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선거구 확정 결과에 따라 총 19명(광주 8명, 전남 11명)의 지역 국회의원 정수도 17명(광주 7명, 전남 10명)으로 줄어든 가능성이 높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 공심위 검증, 결선투표제 경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현실에 직면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황을 조명해본다.

◇3선 이상 중진 =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모두 8명이다. 광주의 천정배(5선), 박주선(3선), 강기정(3선), 김동철 의원(3선)과 전남의 김성근

존재감·리더십 부재...중진들 절반이상 교체 가능성

경선률·선거구 확정 불확실...이정현, 지역구 재선 관심

(4선), 박지원(3선), 주승용(3선), 우윤근 의원(3선) 등이다. 타 지역에 비해 중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내년 총선에서 3선 이상 지역 중진들의 생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존재감과 리더십이 증명되지 않은 중진들에 대한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에서 중진 가운데 절반 이상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흥흥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전노 패권주의에 부정적인 지역 민심도 주요 성향 중진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당 세력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고려, 일부 중진들의 '친노 패권주의' 복무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청정치 청산'이 신당 창당 등과 맞물려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무소속의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신당의 성공 여부 20대 총선에서의 생존을 담보할 것으로 보인다.

◇초·재선 의원=재선 의원은 광주·전남의 장병완 의원과 전남의 이윤석, 김영록, 이정현 의원 등 4명이다. 재선 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3선 중진으로 키워준만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런대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도 있다. 전남의 이윤석 의원과 김영록 의원은 선거구 확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 지형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3선 집임 여부도 관심사다. 특유의 성실성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새정치연합이 어떤 후보를 내놓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 악화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은 광주의 임내현, 박해자, 권은희 의원과 전남의 김승남, 황주홍, 이개호, 신정훈 의원 등 7명이다. 일단 초선 의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편인 가운데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온 초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도 상당하다. 광주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경선의 관문을 통과, 재선의 고지를 넘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전남의 경우, 선거구 확정 이전 최대 변수다. 김승남, 황주홍, 이개호, 신정훈 의원의 지역구는 선거구 확정 결과에 따라 지형이 변할 수 있다. 전남의 모 국회의원은 "경선 룰도, 지역구 지형도, 신당 창당도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구를 다지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비주류 반격 개시

'민집모' 혁신 토론회... "혁신안 현실성 無...통합전대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진영에 대한 비주류 진영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과 '콩나물 모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혁신 토론회를 열고 혁신위와 당내 주류 진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남 '낯은 진보 청산'을 발표한 데 이어 비주류가 연일 지도부와 혁신위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비주류 수장들이 축사를 맡았고, 최근 탈당한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비주류 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거센 비판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원식 의원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와 관련해 "위원장 선정부터 논란이다. 결과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공천혁신안에 현실성이 없고, 또 지나치게 빨리 공천문제를 꺼내들어 당

의 방향을 물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지도부 인사들의 축사에서 비박은 계속됐다.

김 전 대표는 "“항구적 제1 야당”의 길에 들어서서 그 야당이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으며 안 전 대표는 "당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분열해서 패배한 8년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강조했다며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힘을 합칠 방법은 통합 전당대회"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문병호 의원이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공천배제 한다는데, 왜 저항이 없는지 의문하다"라고 말하자, "불만을 얘기하면 다 잘라버리지 않나"(유성엽 의원) "여야가 다 공포정치"(변재일 의원)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조기 선대위, 통합전대 주장 등이 제기되는데 계파를 떠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페이스 북을 통해 "혁신위의 즉각적 해체"를 주장했다.

민집모는 조만간 2차 혁신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확정위, 총선 선거구 확정안 기한내 국회 제출 무산

정의화 의장 여야 합의 촉구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가 확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확정위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남짓한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 유지하는 확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또 실패했다. 확정위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동안 4차례나 회의를 열고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확정위는 문자 공지를 통해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확정안 제출을 못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일 오후 2시 확정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금명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우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의장 찾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과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선거구 확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 확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늦어도 법정

시한인 13일 오전까지는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의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헌법

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의원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거구확정, 권역별 대결 조짐

영·호남 '농어촌 배려' 외침 속 살바싸움

충청권 "의석 감소 좌시 않겠다" 강경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확정 작업이 지역구 수를 묶어 놓은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면서 영·호남·충청권이 대립하는 권역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으로 수도권 의석수는 대폭 늘어난 반면 농어촌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 상황이다. 여기에 선거구 확정위마저도 지역구 의원 수를 246석 현행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어디선가 의석이 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그만큼 줄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권역별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선거구 확정 정국에서 "농어촌을 배려해달라"고 외치며 연대했던 영·호남 의원들은 수면 아래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한 석이라도 덜 줄일 수 있도록 치열한 살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한,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국회의원은 5명이나 적어야 하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충청도는 선거구 확정 논의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나선 상황이다. 한 석

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충남에서 영호남 지역구 사정 때문에 한 석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도 영호남과 연대해 농어촌 지역구 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의석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따라 감소 의석이 1석이 될지, 2석으로 늘어날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내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구 10만~11만명가량의 농촌 지역이 밀집돼 있는 경북은 최소 2석, 최대 4석까지 줄 수 있는 등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북이 최종 몇 석 주는지에 따라 충청권 의석 증원이 어려워지거나 강원에서 두 석을 줄여야 할 수 있어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TK 의원 10여명은 12일 오전 국회 인근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경북지역의 농촌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충청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충청권 의석수 증설 관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